大法판례 업고 개발논리 눌러

경주 경마장·풍납토성 부지 보존결정 의미

"문화재 보호 위한 재산권제한 합법"

주민보상등 정부 대책마련 시급

개발이냐, 보존이냐를 놓고 논란을 빚어 온 경주 경마장 건립부지와 서울 풍납토성 일부 부지에 대해 정부가 마침내 '보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화유적지 보존은 부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위원회측이 보존 결정을 내린 것은 수차례의 실사 결과 밝혀진 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판단에서다.

현지 지역주민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이 내려진 데는 최근의 대법원 판례가 큰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 일대에 대해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적발굴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문화재 관계당국으로서는 비록 발굴을 하지 않았더라도 매장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 해당지역의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확실한 판례를 갖게 된 셈이다.

문화재계의 한 중진인사는 "이번 결정은 경주 고속철도 우회결정과 함께 우리 문화재 보존차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는 개발논리에 밀려 문화재를 보호하지 못한 적이 많은데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적극적인 보존정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주경마장 건설추진위 대표들이 문화재연구소 앞에 도열해 위원들에게 인사를 했지만 이날 열린 문화재위원회는 경주경마장 부지 일부 등을 사적지로 지정 예고했다. [연]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문화재 보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화개혁시민연대 강찬석 문화유산위원장은 "풍납토성의 경우 정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인근 지역의 공지를 구입해 재건축한 뒤 이주를 보장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며 "정부가 문화재 매장지역에 대해 전액 보상을 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설득력 있는 문제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보존 대상 선정과 보상방안·재원마련 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광종 기자
<kjyoo@joongang.co.kr>

"10년 만에 관두라니…" 경주 반발

보존결정 이후 과제

풍납토성 보상 쉽지 않아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고 보상협상을 마무리짓느냐는 후속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특히 경마장 개발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온 경주시와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991년부터 1천3백72억원의 사업비를 책정, 경마장 건립을 추진해 온 경주시는 95년 두 차례에 걸쳐 용지와 진입도로에 대해 3백억원 규모의 보상까지 한 상태다.

경주시는 경마장이 들어서면 연간 5백억~7백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고 지역관광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이 때문에 경마장 추진위원회측은 지난해 정부가 개발 일시중단 조치를 내리자 '1백만 경북도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정부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 왔다.

경주시의회 신성모(申成燮)의장은 "정부가 보존 여부에 대한 결정을 늦춰 피해와 문제를 키웠다"며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투자와 예상 손실에 대해 중앙정부가 어떤 보상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부지 주민들의 반발은 경주만큼 거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존 결정보다는 보상 규모가 문제다.

외환은행직장주택조합이 보유한 5천61평은 외환은행 합숙소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 이주 비용이 필요없어 보상도 쉬울 전망이다.

그러나 미래마을재건축조합이 보유한 6천3백63평 부지는 주택철거와 주민이주까지 끝난 상태여서 보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미 사적지로 지정된 같은 지역의 경당연립재건축조합(2천3백90평)의 경우 서울시는 감정가를 2백50억~2백60억원 정도로 보고 있는 반면 조합측은 4백35억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에 따른 예상이익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는 것이 관건이다. 보상비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황선윤·김영훈 기자
<suyohwa@joongang.co.kr>

불법대출액 '鄭게이트' 4배

동아금고 사건 파문

장부 조작해 최우량 포장

금감원 점검 하고도 놓쳐

동아금고 대주주의 거액 불법대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부실금고 뒤에는 부실 경영주가 있다'는 금고업계의 격언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동아금고 대주주인 김동원(64·사진)씨가 빼낸 고객 돈은 2천5백88억원으로 지난해 나라안팎을 시끄럽게 했던 '정현준 게이트'의 불법대출금 6백37억원의 4배가 넘는다.

쇼씨는 불법대출금 가운데 57억원만 갚았으며, 나머지 2천5백31억원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돈의 행방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해외로 도피하면서 거액을 일시에 처리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금고 사태는 업계 최우량으로 알려진 곳에서 불법대출이 빈번히 이뤄졌으며, 감독당국이 1999년 두차례나 점검했는데도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금감원측은 "당시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고 계좌추적을 하지 않아 불법대출을 적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동아금고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당기순이익 89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7.24%로 업계 최우량 금고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감원의 검사 결과 실제 BIS비율은 자본이 잠식된 마이너스 20.66%로 대부분 회계장부를 조작한 과대포장이었음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김동원씨의 불법대출이 고의·계획적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쇼씨는 64명의 이름을 빌려 3백여차례에 걸쳐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객 돈을 집중적으로 빼냈으며, 영업정지일 직전 해외로 도피했다.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알려진 쇼씨는 정원수 사업과 부동산 투자로 돈을 모아 82년 동아금고를 인수했다. 그는 99년에 하나·국민금고(현 오렌지금고)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이밖에 쇼씨는 안성농축과 그린개발이란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국증권 주식(약 6%)도 갖고 있다.

금고업계는 이번 사건으로 다시 파장이 일까 걱정하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는 "잠잠해지는가 싶던 업계에 다시 대형 악재가 터졌다"며 "영업정지 상태인 만큼 예금자 피해나 예금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재 기자
<jjyee@joongang.co.kr>

동아금고(서울) 현황

대표이사	김동원(사주 김동원의 동생)
주요 주주	김동원 52%, 김씨 외 특수관계인 20.6%
총수신	8,085억원
총여신	7,212억원
당기순이익	89억원(2000년 6월말 기준)

대주주가 퍼먹고 갚지 못한 금고돈
(잔액기준)

금고	금액(억원)
동아(서울)	2,531
동방(서울)	614
발전(서울)	278
창녕	47

자료=금융감독원

기초를 다지자

2001 중앙일보 제언

㉞ 엉터리 번역물

번역가 길러낼 전문기관 세워야

전문가 대책

'무삭제 완역판'이라는 이름을 버젓이 달고 두세 곳 출판사에서 조너선 스위프트의 걸작 『걸리버여행기』가 나왔다. 나는 그 책의 내용을 원문과 꼼꼼히 대조해 보면서 여러 차례 놀랐다.

원문을 마구 빠뜨린 것은 물론 엉뚱하게 번역한 대목이 너무 많아 거의 파본(破本)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런 식의 그릇된 번역관행은 원작을 모독하고 독자를 속임은 물론 출판문화의 기초를 허무는 결과를 빚는다.

원작 중 걸리버 선장의 편지에 '스미스필드 지역에서 법률서적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불타버릴 때'라는 부분은 놀랍게도 '스미스필드 지역이 법률서적의 금자탑으로 빛날 때'로 번역돼 있다.

또 '항해의 상이한 항로와 화물들'이라는 대목은 어처구니 없는 '항해의 변주곡과 방해문장'으로 번역됐다.

오늘날 일본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명치유신 이후 모든 분야에 걸친 외국서적을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번역, 보급해온 결과다. 일본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두 사람이나 나온 것은 바로 번역문학의 기초 위에서 가능했다.

나는 외교관인 친구로부터 파리에서 제일 큰 서점에 들어가 보고 실망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일본문학 코너가 별도로 있을 정도로 번역된 일본작품이 많았다고 한다.

곳곳에 엉뚱한 번역 거의 원작 모독수준

반면 우리 문학작품은 기타 코너에, 그것도 맨 밑바닥에 4~5권 정도 꽂혀 있었다는 것이다. 영국의 하이네만 출판사는 아프리카 작가들의 작품을 3백여 종이나 영어로 출판했다.

그런데 서울의 대형서점에 가보면 더욱 실망한다. 우리 작품이 외국어로 번역된 것을 찾아보면 20여권에 불과하다. 한국방문의 해나 2002년 월드컵이 무색하다. 제대로 된 번역물을 많이 내는 게 국제경쟁력의 원천이 아니겠는가.

이동진

<전 대사, 번역문학가·해누리기획 편집인>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정교한 설계와 기초공사가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

번역이 바로 그렇다. '탄탄한 기초'란 무엇일까. 우선 국내 단행본 출판의 경우 영어·일어 등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이런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번역을 대학교수들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야 날림 번역, 제자들이 해주는 졸속 번역이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 번역 전문가 양성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번역가를 길러내려는 노력 없이 개인적 역량에만 의존하고 있다. 번역왕국 일본을 지탱하는 번역가 전문 양성학원 '바벨'의 존재를 한국 사회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2백자 원고지 한장에 1천~2천원밖에 안주는 번역료도 번역의 기초를 허무는 중대요소다. 출판사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양원곤<인터넷 번역학원 '엔터스 코리아' 대표>